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8
----------	------

발의연월일 : 2024. 7. 30.

발 의 자 : 박홍배 · 이기현 · 이상식  
민병덕 · 김현정 · 김남근  
강득구 · 강훈식 · 한준호  
정진욱 · 이수진 · 박정현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 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권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점

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점 폐쇄에 관한 외부 전문가 및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결과
2.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은행에 알려야 한다.

④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안내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29조의2(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운영 중 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영업점 폐쇄에 관한 외부 전문가 및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결과</u></li> <li><u>2.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u></li> <li><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li> </ol> <p><u>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u></p>

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은행  
에 알려야 한다.

④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부터 3개월 전  
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안내의 방  
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